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폴란드

Republic of Poland

2021년 6월 18일 | 선임연구원 조영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1.3만 km ² 	인구 37.9백만명 (2020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대외정책 친미국, 반러시아 
GDP 5,942억 달러 (2020년) 	1인당GDP 15,654달러 (2020년) 	통화단위 Zloty (Zl) 	환율(U\$기준) 3.9 (2020년) 

- 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및 러시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서유럽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과 낮은 제조비용 등의 특징을 활용하여 자동차 산업 등에서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991년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7%)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세계경기회복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3.5%)이 전망됨.
- 2015년에 집권한 보수우파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2019년 선거에서도 승리하여 하원에서 과반수 의석, 상원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3년 10월 총선까지 정치적 안정이 전망됨. 그러나 '법과정의당' 주도 정부와 의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축소하는 법 제정, 낙태 전면 금지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 반이민 정책과 사법 및 성소수자 정책 등에서 EU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하며 EU와 갈등관계에 있고, 미국과는 군사기지 확대 등을 추진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서방의 대러 제재를 지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상호 외교관을 추방하고 비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89. 11. 1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6)

주요협정 투자증진-우호협정('90), 항공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약('92), 사증면제교환각서('93), 문화협정('94),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94), 운전면허상호인정 및 교환협정('99), 세관협력-공조협정('00), 경제협력협정('05), 관광협력협정('05), 사회보장협정('10),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10), 국방협력협정('14),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4,333,707	5,314,955	5,639,354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건전지 및 축전지, 자동차 부품
수입	673,268	771,113	834,172	자동차 부품, 기타금속광물, 산업용 전자기기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12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299건, 4,216,878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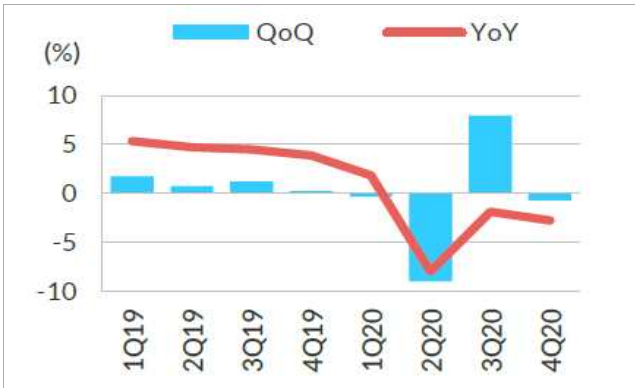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3.1	4.8	5.4	4.5	-2.7
소비자물가상승률	-0.6	2.0	1.7	2.3	3.4
재정수지/GDP	-2.4	-1.5	-0.2	-0.7	-8.2

자료: IMF, EIU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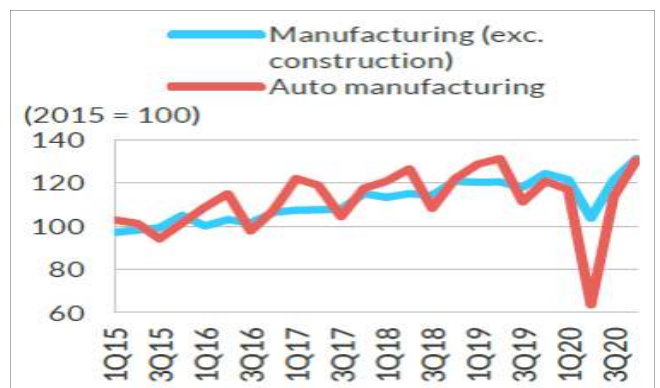
- 폴란드는 1990년대에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며,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EU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함.
- EU 가입 후 폴란드 경제는 EU 회원국들로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제조업 제품 수출 증대, EU 기금 수혜 등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16~19년 연평균 4%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 폴란드 경제는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로 급격히 경기가 침체되었던 1991년(-7.0%)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간소비(-3.1%) 및 투자(-8.4%)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0년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이러한 성장률은 중동부 유럽의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5.0%), 체코(-5.6%), 슬로바키아(-5.2%)와 폴란드)들 중 하락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이는 정부 소비(3.2%) 및 상품수출(3.5%) 증가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분기별 성장률은 2분기에 -16.2%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3분기에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회복 등에 따라 5.4%로 회복되었음.

성장률 추이



자료: Fitch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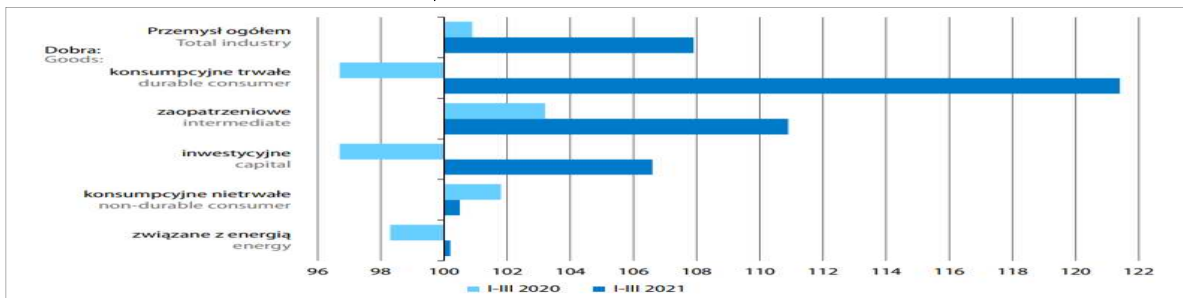


자료: Fitch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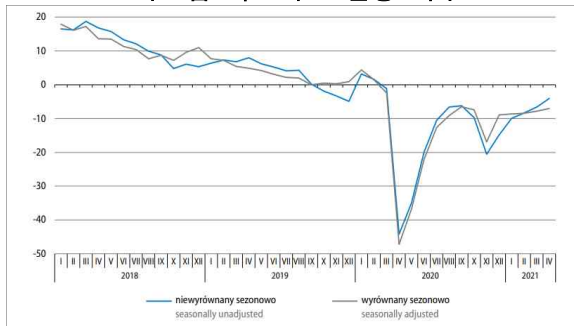
- 국내소비 및 투자 증가와 EU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1년 3.5%, 2022년 4.5%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2021년에는 제조업 생산 10.6%, 투자 3.2%, 민간소비 3.8% 증가가 전망됨. 1분기에 내구소비재를 비롯하여 제조업 생산이 증대되고 있으며 제조업 비즈니스 환경지수 및 소매판매 지수도 상승 추세를 기록하였음.

2020년, 2021년 제조업 부문별 성장률 비교(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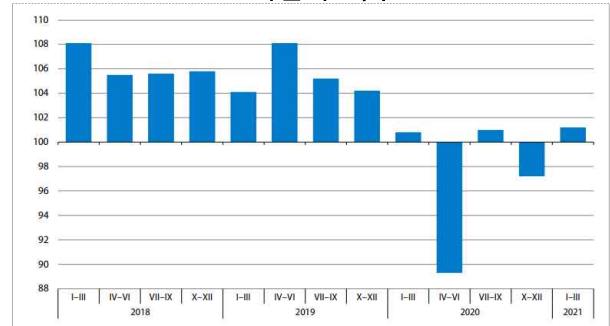
자료: 폴란드 통계청

제조업 비즈니스 환경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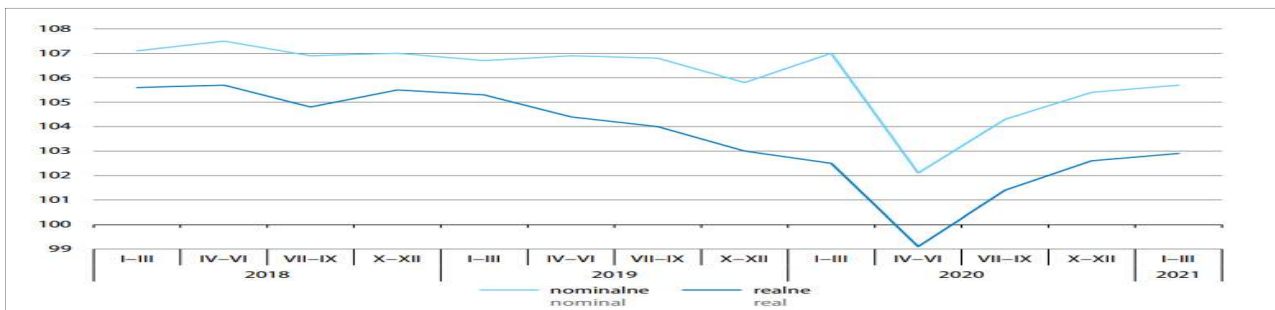
자료: 폴란드 통계청

소매 판매 지수



자료: 폴란드 통계청

실질·명목 임금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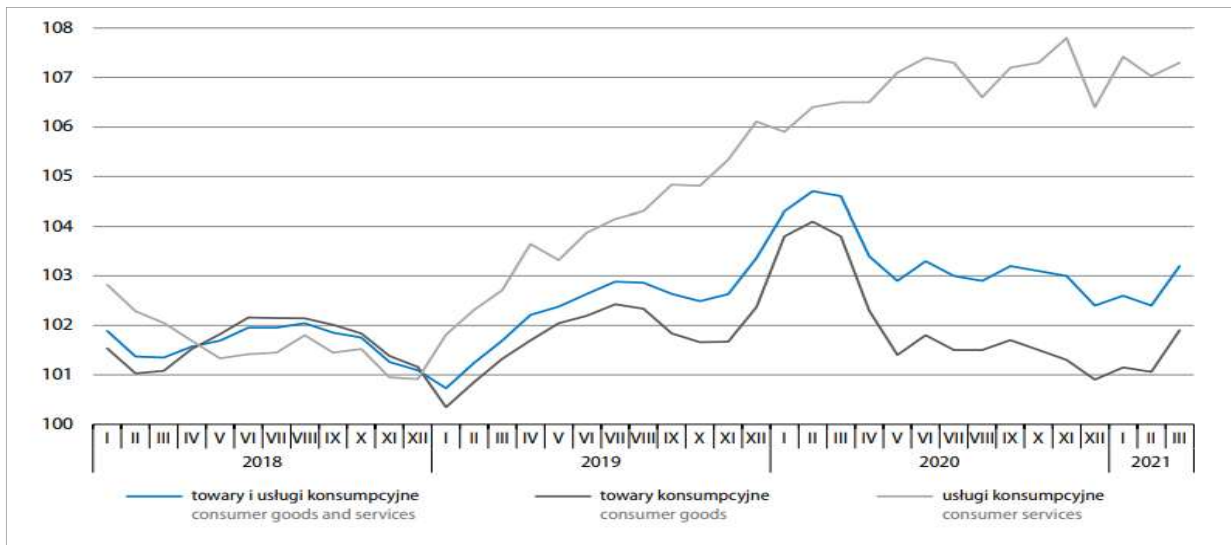
자료: 폴란드 통계청(전년동기 대비)

- 또한 정부는 2021년 월 최저임금을 EU에서 세 번째(라트비아(16.3%), 슬로베니아(8.9%) 다음)로 높은 비율인 7.7%(20년 2,600즈워티(610.8유로) ⇒ '21년 2,800즈워티(614.1유로)) 인상하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7.6%(17즈워티 ⇒ 18.3즈워티) 인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3.4%를 기록함.
- 2020년에는 국제에너지 시장의 저유가 영향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전력, 통신, 운송 등의 서비스 요금 상승과 유례없이 낮은 기준금리(2020년 3월 1%에서 4월 0.5%, 5월 0.1%로 인하) 등은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2021년 1~3월에는 에너지 국제가격의 상승에 따라 물가가 상승('21년 3월 2.8%)하였으며, 연평균 3.2%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망됨.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2018.1월~2021.3월)



자료: 폴란드 통계청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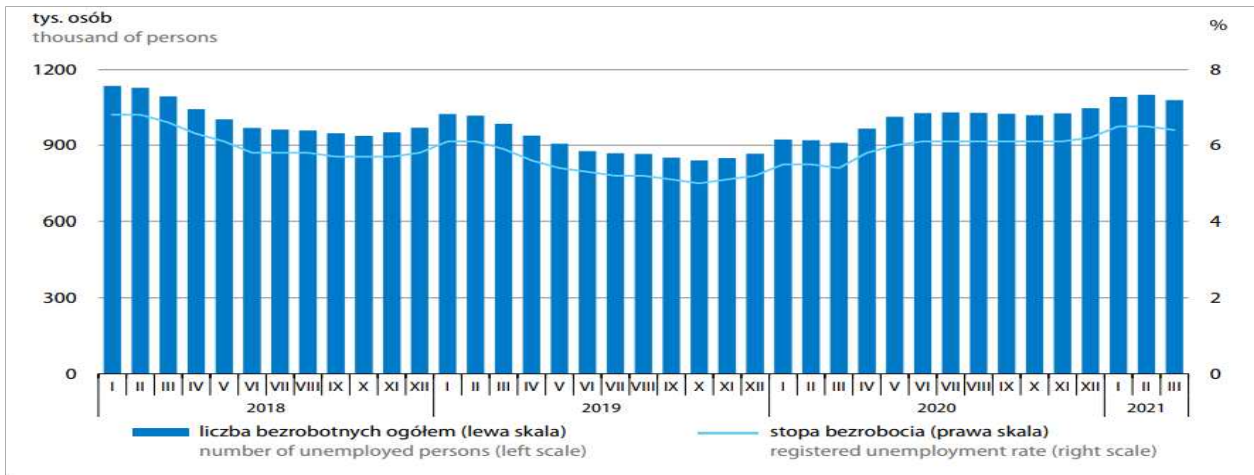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출로 재정적자 지속

- 폴란드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nti-crisis Shield'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보호, 기업 지원, 금융시장, 보건, 공공투자 등 다섯 개 중점 분야에 GDP의 12%를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됨.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019년 -0.7%에서 2020년에는 -8.2%로 확대됨. 경기회복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21년에는 -4.7%, 2022년에는 -2.6%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21년 2월에는 경제의 경쟁력 제고, 녹색에너지, 디지털 전환, 의료 시스템 개선, 녹색 및 지능형 교통 등 5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76억 유로 규모의 경제재건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음.

2020년 연말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2%로 상승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자 수는 3월 이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도 1분기 말 5.4%에서 4분기 말에는 6.2%로 상승하였음.

폴란드의 실업자 수와 실업률 추이(2018.1월~2021.3월)



자료: 폴란드 통계청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3,719	-1,960	-7,530	2,931	20,906
경상수지/GDP	-0.8	-0.4	-1.3	0.5	3.5
상 품 수 지	2,262	-463	-7,327	1,339	13,700
상 품 수 출	196,383	228,214	256,230	260,778	269,900
상 품 수 입	194,121	228,677	263,557	259,439	256,200
외 환 보 유 액	109,503	108,019	110,384	115,823	138,513
총 외 채	340,121	383,047	362,192	353,962	358,509
총외채잔액/GDP	72.0	72.7	61.7	59.4	60.3
D.S.R.	30.1	26.5	26.1	25.9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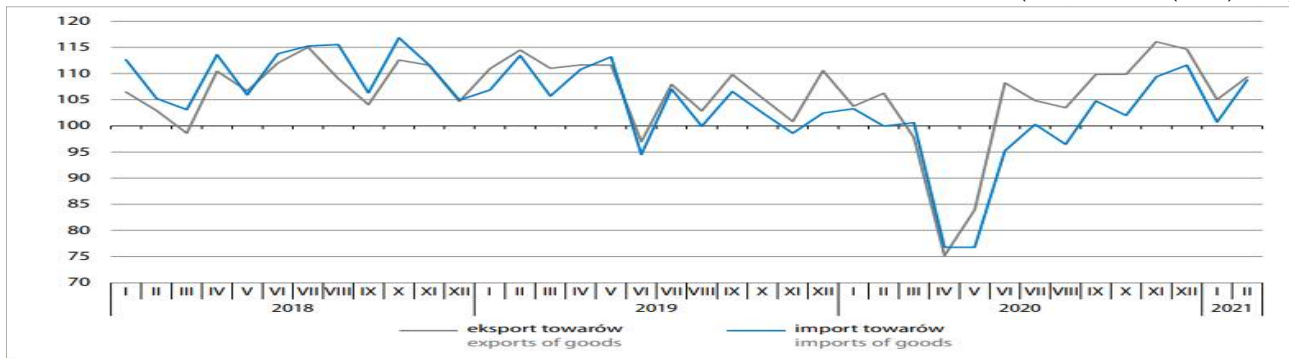
자료: IMF, EIU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의 와중에도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

- 코로나19 상황에도 EU 시장에 대한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제품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음.
- 2020년의 월별 교역액은 4월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5월에 반등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음.

폴란드의 교역액 변동(2018.1월~2021.2월)

(단위: 전년동기(=100)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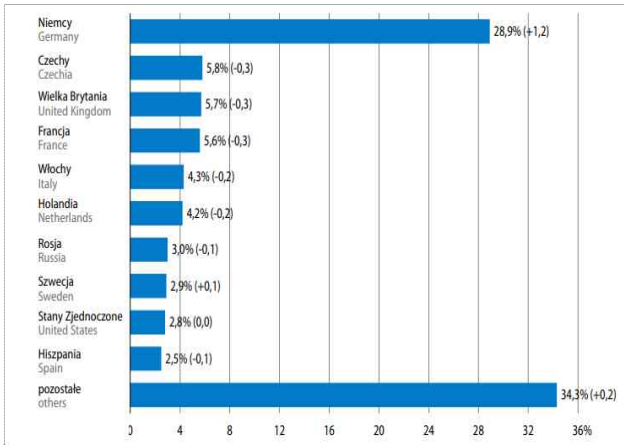


자료: 폴란드 통계청

- EU는 폴란드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최대 교역국인 독일은 수출의 28.9%, 수입의 21.8%(2019년)를 점유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독일, 영국, 체코,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는 독일과 함께 중국(14.6%), 이탈리아(5.0%), 러시아(4.5%) 등이 주요 상대국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기계, 정유 제품, 식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 전자기기, 석유 및 가스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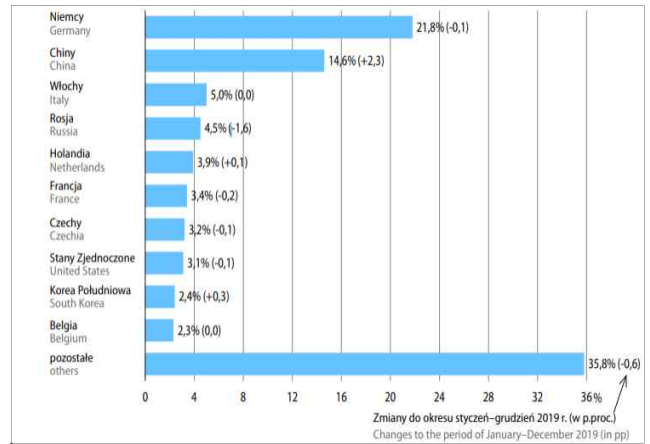
대외거래

폴란드의 주요 수출상대국



자료: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의 주요 수입상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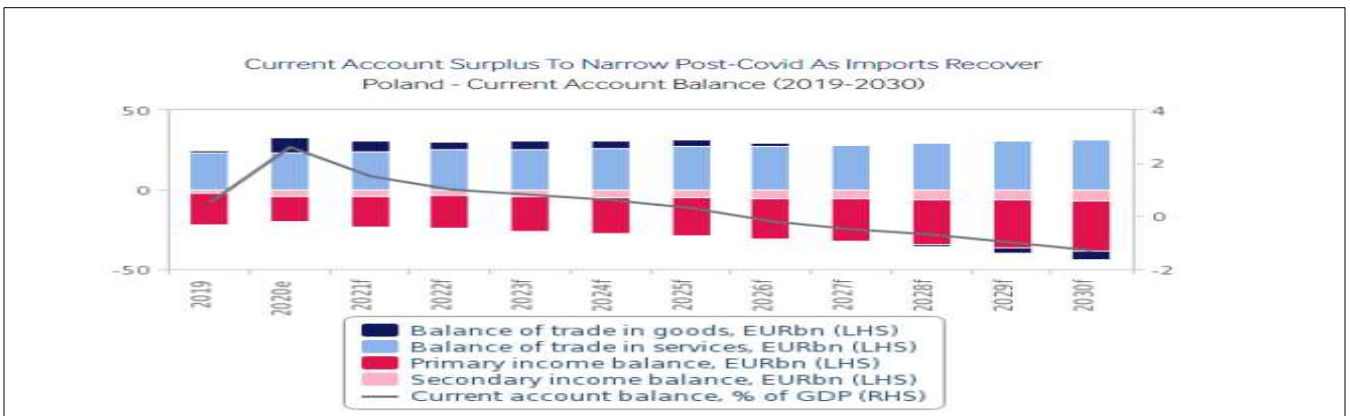


자료: 폴란드 통계청

-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EU 시장으로의 안정적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국내 소비증가에 따른 상품수입액의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의 경상수지 항목별 변동 추정 및 전망(2019~30년)

(단위: %)



자료: 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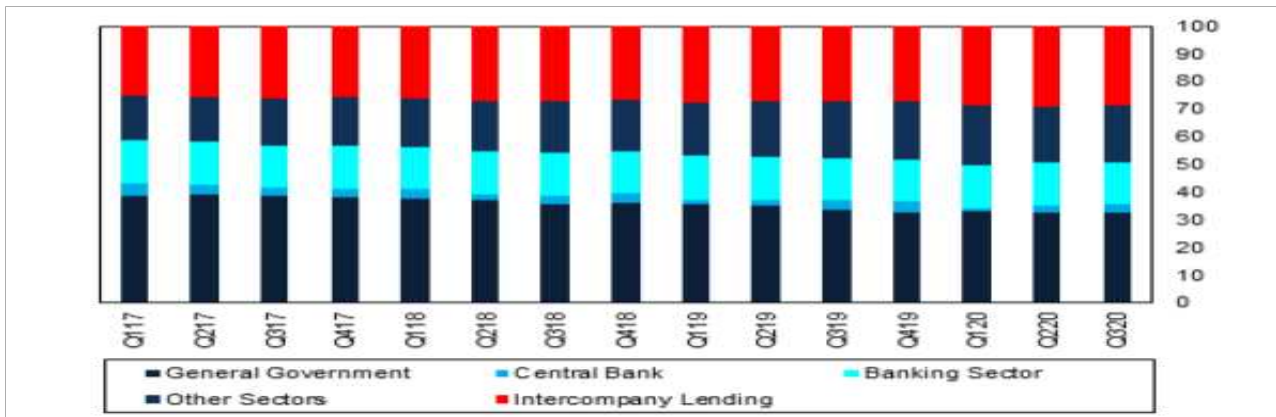
외채상환능력

비교적 안정적인 외채상환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2020년 공적채무 증가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7년의 72.7%에서 점차 하락하여 2020년에는 60.3%를 기록하였으며, 외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2016년(30.1%)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에는 24.8%를 기록함.
- 외환보유액은 2018년(1,080억 달러) 이후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385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2019년의 45.8%에서 2020년 58.9%로 증가함. Fitch는 공적채무 비중이 2021~22년 62.3%를 기록한 뒤 경기 회복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2025년에는 56.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폴란드의 GDP 대비 총외채 구성비율(2017~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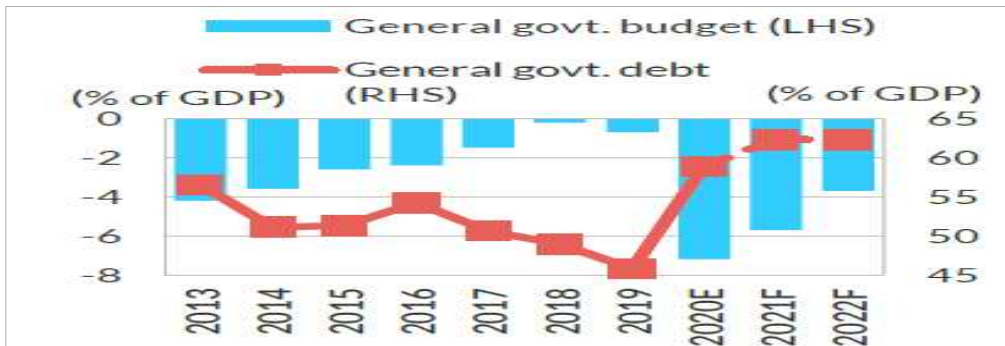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Fitch

폴란드의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변동 추이(2013~22년)

(단위: %)



자료: F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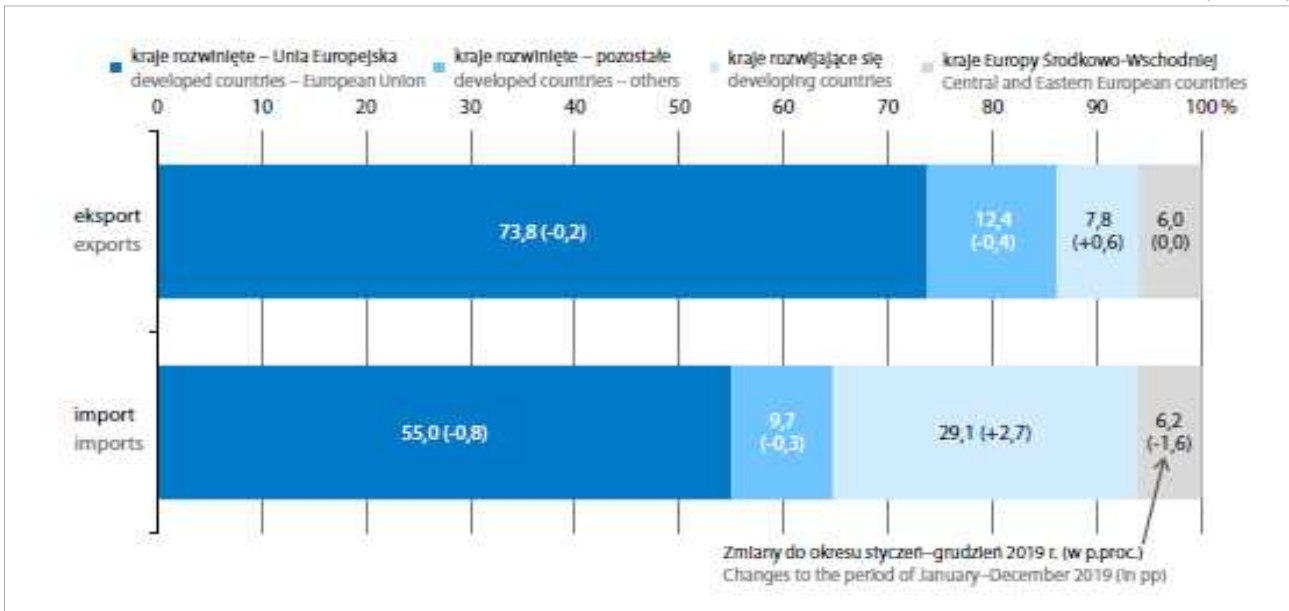
구조적취약성

EU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 폴란드는 최대 교역국인 독일(전체 교역의 28% 비중)을 비롯한 EU 회원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EU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 2020년 기준 EU 지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3.8%를 점유하고 있으며, EU 지역으로부터의 수입도 전체 수입액의 55%를 점유함.
- 이처럼 EU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로 인해 폴란드 경제는 EU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수출입 노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경제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폴란드의 주요 교역대상 지역(2019년)

(단위: %)



자료: 폴란드 통계청

구조적취약성

-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 숙련된 기술 인력을 비롯한 다수의 인력이 EU의 여타 회원국들로 유출되어 국내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폴란드 전체 인구의 6.52%인 248만 명이 EU의 여타 회원국들에 거주하며 노동 등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EU 회원국 가운데 루마니아(353만 명) 다음으로 큰 규모임.

EU 회원국의 EU 거주 외국인 출신 상위 5개국(2019년)

(단위: 명, %)

출신국	EU 거주 외국인 수	EU 거주 외국인 전체 대비 비율	출신국 인구 대비 비율
루마니아	3,533,186	8.52	18.50
폴란드	2,475,906	5.97	5.52
이탈리아	1,702,602	4.11	2.82
포르투갈	1,195,934	2.89	11.64
독일	889,484	2.15	1.07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2020.

- EU의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폴란드 사회의 숙련인력 수요는 EU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숙련인력 확보가 주요 경제·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2030년 EU의 평균 숙련인력 수요 비중은 전체 인력의 40%이나, 폴란드는 이 비중이 60%에 이르러 숙련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숙련도별 노동인력 수요 비중(2014~30년)

(단위: %)



자료: https://www.cedefop.europa.eu/files/skills_forecast_2020_poland.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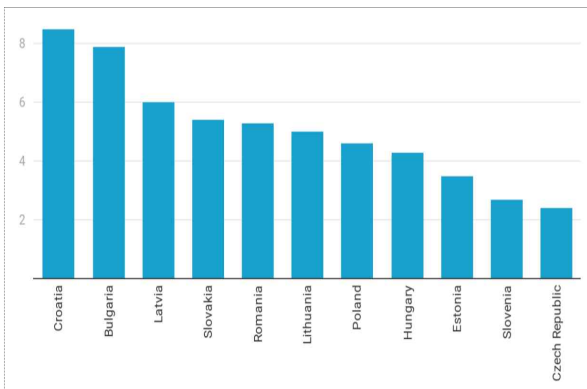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향후 7년 동안 EU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한 경기 회복 전망

- 폴란드는 EU로부터 2027년까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자금들의 활용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는 EU의 7년 장기예산안(2021~27년) 및 코로나19 대응 경제회복기금의 주요 수혜국으로 향후 1,576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EU 기금을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과 함께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에 지출할 계획임. 특히 2021년 2월 발표된 경제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EU 기금 가운데 276억 유로를 녹색에너지산업 육성 및 저효율 에너지 산업구조 개선과 친환경 스마트 교통·운송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등에 투자할 계획임. 또한 향후 EU 기금은 태양광 발전, 항만 건설,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투자될 계획임.
- 폴란드는 앞서 EU 기금으로부터 2007~13년 1,020억 유로, 2014~20년 1,060억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이를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하고 있음. EU의 지원으로 폴란드 경제가 안정되고 고용률도 상승하고 있는데, 2005년의 고용률은 58.3%로 EU 평균인 66.8%보다 8.5%p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EU 평균 고용률(72.4%)을 상회하는 73.6%를 기록하였음.

2024년까지 EU 기금 지원액의 국가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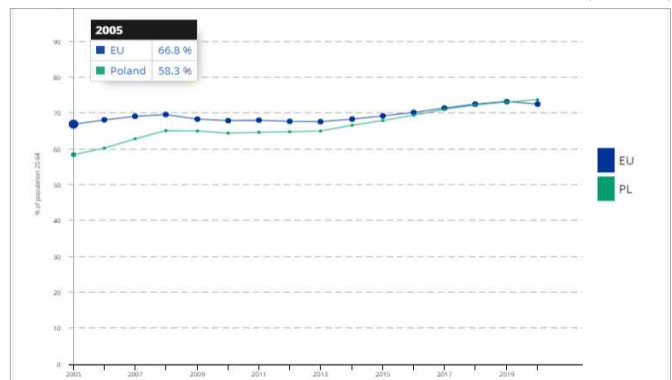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https://www.reuters.com>

EU 가입 이후 폴란드 고용률 변동(2005~20)

(단위: %)



자료: eurostat

자동차 산업 발전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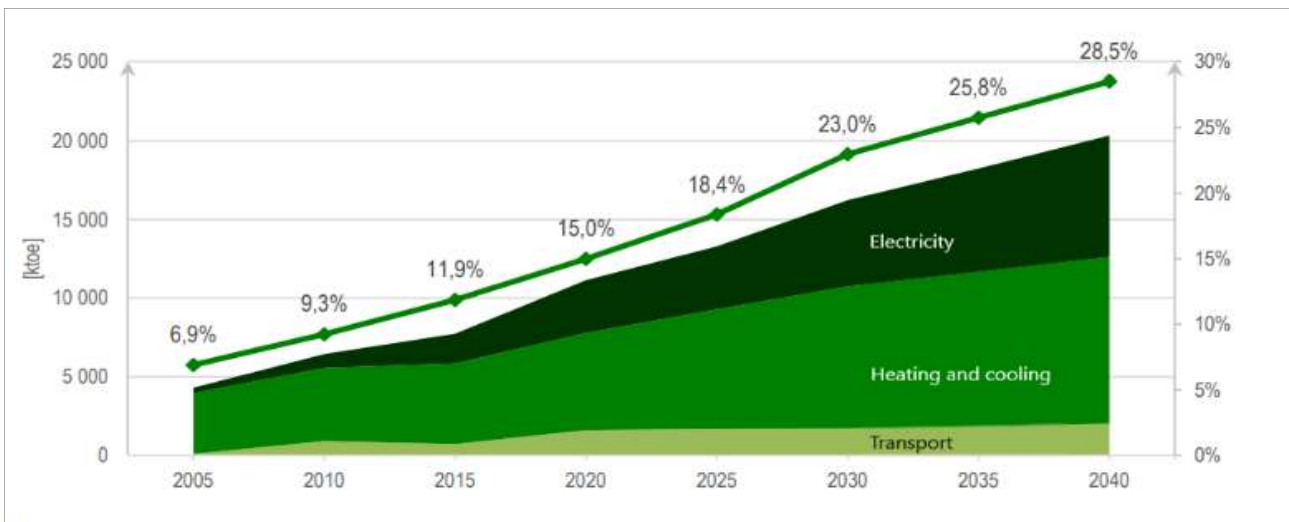
- 폴란드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EU 시장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중·동부 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 및 수출 확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과 EU 지역으로의 안정적 수출을 통해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폴란드 GDP의 4%, 제조업 생산의 11%를 점유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산업에는 13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연간 80~90만 대의 승용차와 7~9만 대의 대형차를 생산하고 있음.
- 폴란드 자동차 산업에는 Fiat, Opel, Toyota, Volkswagen, MAN(상용차), Volvo, Scania AB 등의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향후 전기자동차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정책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2040' 추진

- 2021년 2월 폴란드 정부는 2040년까지 발전의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정책 2040' 결의안을 채택함.
- 이 결의안은 발전의 석탄 의존도를 2019년의 70%에서 2030년 56%, 2040년 28%까지 줄이기로 하였으며, EU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감축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37.5%, 2040년 11%로 줄일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폴란드 정부는 국내 에너지 최종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9년 8.9%에서 2030년 23%, 2040년 28.5%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EU 석탄 사용지역 전환기금(EU funds for coal regions transformation)'으로부터 154.9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폴란드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자료: <https://www.dentons.com/en/insights/articles/2021/march/15/polish-energy-policy-2040>

- '에너지 정책 2040'의 목표 달성을 위해 폴란드 정부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풍력발전 용량은 현재의 6.25GW에서 2030년까지 10GW로, 태양광 발전 용량은 현재의 2.2GW에서 2030년 7GW, 2040년까지 16GW로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아울러 폴란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간 법인세 감면, 전략적 프로젝트 투자비용의 25%이상 현금지원, 5년 이상 부동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정책성과

정부와 광산업계 2049년까지 탈석탄 완료 합의

- 2021년 4월 말 폴란드 정부와 광산업계는 2049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음.
- 폴란드 정부는 국영 '폴란드 광업그룹(PGG)'의 석탄 광산을 2049년에 완전히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함. 폴란드는 세계 9위의 석탄 생산국으로, 현재 전력의 70%를 석탄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음.
- 그동안 폴란드 정부는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탄광업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음.
- 석탄 수요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 증가에 따라 석탄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었으나, 두다 대통령과 여당인 '법과정의당'은 자신들의 주요 지지 기반인 석탄업계를 지원해 왔음. 폴란드 정부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탄광 산업에 208억 유로를 지원하였음.
-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와 광산업계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49년에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풍력 발전 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 투자 확대, 법적·제도적 개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동안 폴란드 정부는 EU의 에너지 정책(화석연료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국내 탄광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해 왔음.
- 2019년 폴란드 정부는 EU 내에서 유일하게 재정적 여력 부족을 이유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한다는 EU 계획을 거부한 바 있음. 그러나 2021년 정부는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 EU 등 서방과의 협력 등을 위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동안 반대해 왔던 석탄업계와는 탄광 직원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제공 등의 제안을 통해 합의에 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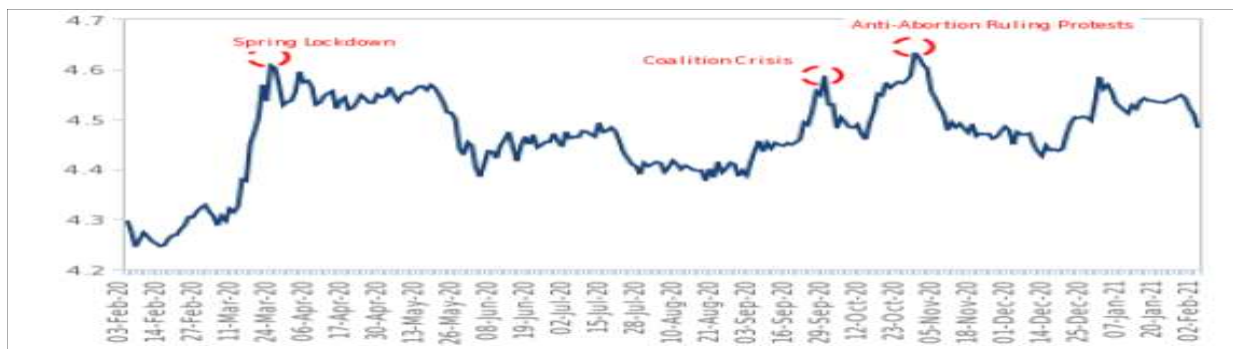
정치안정

2015년 이후 집권한 우파 성향의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 증대

-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법과정의당'이 2019년 총선에서도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 유지로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해 왔으며 2020년 7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여당이 지원한 두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최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두다 대통령은 무소속이나 2015년 대선에서 '법과정의당' 후보로 당선되었으며, 현재까지 집권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음. 2020년 7월 대선에서 두다 대통령은 집권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51.2%의 득표율에 머물러 48.8%의 득표율을 기록한 '시민연대' 소속 후보에 2.4%p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함.
-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은 2015년과 2019년 사회복지정책을 제시하며 집권에 성공하고 우파연합을 형성하여 안정적으로 집권해 왔음. 그러나 2020년 초 정부 및 여당의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법개혁 추진과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낙태 제한 결정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20년 9월에는 EU의 'EU 가치 준수' 조건을 내세운 EU 예산 승인 과정에서 우파연합 내부의 대립으로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폴란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여당의 지지율은 2020년 9월의 39%에서 11월에는 30%로 하락하였음.
-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갈등은 환율 등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20년 9월의 집권 우파 세력 내의 갈등과 2021년 낙태 반대 시위 등의 시기에 즈워티화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음.

폴란드의 주요 정치적·사회적 사건들과 환율 변동

(단위: 즈워티/1달러)



자료: Fitch

좌파 성향 2개 정당 통합, 좌파 통합신당 출범

- 2021년 3월 폴란드 하원에서 24석을 보유한 사회당(SLD)과 17석을 보유한 Wiosna 당이 통합하여 우파 연합에 대응하는 좌파 통합 신당을 결성하기로 함.
- 양당의 통합 절차는 사회당이 New Left로 당명을 개칭하고, Wiosna 당원들이 New Left 신당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2021년 9월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 지도부를 선출하여 실질적 통합 절차를 완성할 예정임.

사회안정

낙태 전면 제한 및 성소수자 억압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 발생

-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형의 태아에 대해 낙태를 허용하는 기존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가 발생했고 현재 결정이 발효된 2021년 1월에도 다시 시위가 재개되었음.
- 헌법재판소의 10월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현재 결정의 발효를 3개월 연기하였으며, 2021년 1월에 현재 결정이 발효되었음. 1월 이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들에서 시위가 발생하였음.
- 카톨릭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이며, 보수 우파세력인 '법과정의당'은 2007년 이후 여러 차례(2016년, 2018년)에 걸쳐 전면적인 낙태 금지 법안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이를 비판해 왔음.
- 이외에도 정부는 특정 지역에 'LGBT free zone'을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성소수자 억압 정책으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ESG 신용영향점수는 신흥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1년 2월)는 ESG 요소가 폴란드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환경과 사회에서는 3등급(부정적)이나 지배구조에서는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하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환경부문의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에너지 공급에서 석탄의 높은 비중을 감축하는 문제로 인해 전체적으로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인구 고령화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되며, 지역 및 도시·농촌 간의 소득(실업) 격차와 이와 관련된 정치적 갈등이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EU 가입 이후 제도와 지배구조 측면이 개선된 것이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또한 재정 준칙에 따른 재정정책의 효율성,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최근 정부의 사법 독립성에 대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제관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지지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외교관 추방 갈등

-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에 대한 서방의 대러 제재를 지지하고 자국 내 미군 기지를 확장하며 러시아와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음.
-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공공연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을 비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러시아 견제를 위해 폴란드 주둔 미군 병력의 증대를 추진하였음.
- 2021년 4월 15일 폴란드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개입과 연방기관 해킹을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것과 연대하여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명을 추방한다고 발표하였음. 이후 러시아 외교부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러시아 주재 폴란드 외교관 5명의 추방을 발표하며 양국 간의 갈등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반민주주의 정책으로 EU와의 관계 악화

- 집권 '법과정의당'의 반민주주의, 보수주의 정책 실시로 이를 비판하는 EU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의회의 판사 임면이나 징계 가능 법안 제정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반이민 정책, 성 소수자 정책 등에서 EU의 민주주의 가치와 충돌하며 갈등을 겪고 관계가 악화되었음.
- 2020년 11월에는 EU의 장기 예산집행안 논의 과정에서 EU가 제시한 '민주주의 가치 준수' 수용을 폴란드 정부가 거부하며 폴란드와 EU가 갈등을 겪은 바 있음.
- EU와의 갈등은 폴란드 정치 및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EU 내부에서는 최근의 반법치주의 정책 등으로 폴란드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중·동부 유럽 비셰그라드 국가들과의 협력 지속

- 중·동부 유럽 4개국 협력체인 폴란드는 여타 회원국들(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과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EU 내에서 난민 등의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헝가리와는 2020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폴란드는 비셰그라드 창설 30주년 기념을 위해 2021년 2월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유럽-미국 간 협력,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에너지 안보 및 환경 보호 등의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였음. 최근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주요 의제로 EU의 기후정책 및 이민 정책, 대벨라루스 및 대러시아 관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음.
- 비셰그라드 4개국은 2018년 6월의 EU 난민 문제 정상회의에 공동으로 불참하는 등 회원국이 이해관계를 갖는 EU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국제관계

미국과 주둔 병력 확대 등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 미군이 순환방식으로 주둔하여 왔으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 강제 병합 이후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4,5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2020년 8월에는 폴란드-미국 간 협정을 통해 폴란드 주둔 미군 병력의 증대에 합의함.
-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기지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루마니아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미국 포격로켓시스템(HIMARS: High-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을 구입하기도 하였음.
- 폴란드와 미국은 2020년 8월 방위협력 강화 협정(Polish-United States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 체결을 통해 주둔 미군 병력을 기존의 4,500명에서 5,500명으로 증대 하는데 합의하였음. 또한 양국은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2만 명의 미군 병력이 폴란드에 즉시 배치 가능하도록 하고 미군의 폴란드내 군사훈련도 확대하기로 합의함.

외채상환태도

비교적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폴란드 정부는 1991년 파리 클럽에서 당시 외채규모의 50%를 탕감받고 채무상환 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을 하였으며, 2009년 조기상환 후 현재 파리클럽 채무 잔액은 없음. 이후 채무재조정 경험은 없으며,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Moody's	A2 (2021.4)	A2 (2019.4)
Fitch	A- (2021.3)	A- (2020.9)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존 등급 유지, 대 EU 갈등을 위험요인으로 평가

- 2020년 이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 대응과 산업다각화 성과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폴란드에 대해 기존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EU와의 갈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하였음.
- Fitch와 Moody's는 각각 2021년 3월과 4월 지난해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적 대응(재정지출, 통화완화 정책 등)과 2021년의 경기회복 전망, EU 기금의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존 등급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으로는 폴란드 정부의 EU와의 갈등 심화, 경제적으로는 만성적 재정적자 지속 등을 폴란드 국제신인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폴란드는 2020년에 1991년(-7.0%)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간소비(-3.1%) 및 투자(-8.4%) 감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큰 폭('19년 -0.7% ⇒ '20년 -8.2%)으로 확대되었으며, 실업률도 상승하였음.
- EU 시장에 대한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제품과 농산물의 수출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EU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EU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경제구조임. EU는 폴란드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최대 교역국인 독일은 수출의 28.9%, 수입의 21.8%(2019년)를 점유하고 있음.
-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법과정의당'이 2019년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2020년 7월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여당이 지원한 두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낙태 전면 제한 등의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음.